

독일 통일에서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것

구연정*

필자는 현대 독일의 문화와 문학을 전공한 연구자이다. 요즘처럼 인문학의 가치에 야박한 시대에 외국 문학과 문화를 공부한 이유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의 경우는 결코 하나의 형용어로 표현할 수 없는 독일의 굴곡지고 고단한 역사, 그리고 그와 더불어 비애와 우수, 반성과 성찰로 점철된 독일 문화와 문학의 특성에 매혹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런 고난도 패배도 모르고 찬란한 승리와 성공의 길만 걸어온 인생이 잘나 보이긴 하지만 매력적이지 않은 것처럼, 뜨거운 욕망과 실패, 생채기와 용이가 들성들성 박혔지만 끊임없이 성찰과 성장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마력에 가까운 매력을 발산하는 것처럼, 독일이란 나라는 나에게 늦여름의 나무처럼 여기저기 부서지고 갈라졌지만 많은 상처를 양분으로 삼아 여전히 성장을 멈추지 않은,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진 매혹적인 나라였다.

독일은 20세기만 들어서도 두 번의 큰 전쟁과 파국, 혼돈과 분단의 역사 속에서도 통일을 이루어냈는데, 이런 국가의 저력에 감탄하는 것은 비단 나 혼자만은 아닐 것이다. 특히 분단과 통일은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중요한 이슈인 만큼 독일의 통일론, 통일 방법론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치인들이 그러한데, 정치인들이야 사건의 진실을 추구하는 집단은 아니라 하더라도, 남의 나라 일을 인용하면서 아전인수 격으로, 자가당착적으로 인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숭실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연구중점 교수

지난 여름을 뜨겁게 달군 주요 정치 논쟁으로서 한 야당 대표의 통일부 폐지와 ‘평화적 흡수통일론’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야당 대표가 7월 21일 여야 대표의 토론의 자리를 마련한 SBS의 한 프로그램에서 통일부 폐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독일의 예를 들어 자신은 ‘평화적인 흡수통일론자’라고 밝히면서 시작되었다. 이 대표가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니, 통일부 수장인 이인영 장관이 그에 대해 역사의식 부족을 지적하자 논쟁은 SNS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이 논쟁을 따라 읽어가면서 필자는 연구자로서 독일 통일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서 벗어난 몇 가지 진술을 지적하고 싶어졌다. 우선 독일은 흡수통일론을 지향한 적이 없다. 사후적으로는 평화적 흡수통일이 되었지만, 평화적 통일을 준비한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의 핵심은 ‘긴장 완화와 교류 협력’과 같은 접촉을 통한 변화였고, 그런 만큼 통일은 당장 성취할 수 있는 눈앞의 목표물처럼 조준된 것이 아니라 장기적 과제로서 설정된 것이었다. 이러한 동방정책은 이후 정권이 바뀌어도 ‘평화적 공존을 위해’ 꾸준히 지속되었다. 그런 와중에 독일 통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거의 우연히 일어난 한 사건 때문이었다.

라디오나 서신 왕래, 민간 교류 등을 통해 서방세계와 자주 접촉한 동독의 주민들이 여행에 대한 자유를 요구하였고, 동독 주민의 시위가 확대되자 동독 공산당은 TV 생중계로 ‘여행 자유화에 대한 임시 법안’을 발표한다. 법안 발표 후 그럼 언제부터 여행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기자의 질문에 당 대변인은 ‘즉시 Sofort’라고 대답한다. 사실 동독 공산당이 결정한 것은 실질적인 여행의 자유화가 아니라 여행을 위한 비자 발급 시간을 단축한다는 것 정도였는데, 당 대변인이 기자의 갑작스런 질문에 그만 말실수를 한 것이다. 서방세계로 여행할 수 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퍼져나갔고, 동베를린 주민들은 ‘즉시’ 차를 몰고 도심 한가운데 브란덴부르크 문으로, 자유 도시 서베를린과 자신들을 나누고 있던 장벽으로 달려갔다. 몰려오는 인파를 감당하지 못한 경비병들은 굳게 닫힌 철문을 열어주었고, 그리고 그날 밤, 20여 년간 동독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세워진 베를린 장벽이 동독 주민들의 손에 의해 무너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전세계의 방송을 타고 동서 이데올로기의 대립, 냉전을 끝낸, 평화적인 ‘하나됨’을 보여준 사건으로 스펙타클하게 보도됨으로써 이제 동서독의 역사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단계, 실질적인 통일의 과정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무너진 장벽을 다시 쌓을 순 없지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보면 독일 통일은 서독 정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변화를 갈망한 동독 주민이 두 손으로 먼저 분단의 장벽을 허물어버린 행동 없이는 사실상 요원했을 수도 있다. 물론 장벽 붕괴 후 서독 주도의 통일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동독 체제를 서독 체제에 흡수하는 식의 흡수통일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는 변화를 갈망한 동독 주민의 의식과 행동, 거의 이십 년에 걸친 서독의 평화적 공존, 통일정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독일 통일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서독 측이 긴장 완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접촉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 이를 통해 경직된 동독 사회에도 변화를 갈망하는 바람이 점차 커졌고, 마침내 역사적 필연과 같은 ‘우연’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정권 체제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식의 흡수통일이라는 무지막직한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우선 서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을 통일의 과정과 방법으로 내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만약 독일 통일에서 그 방법론을 인용하고자 한다면 말이다.